



제86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충청북도 사회복지수준 분석

일시 | 2016. 12. 26(월) 14:00~16:00

장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

w w w . c w i n . o r . k 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충청북도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이 세워졌고, 2007년부터 시작된 제1기의 지역 사회복지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를 일관되게 향상시켜옴.

○ 최근 들어 한국의 사회복지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변화로써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함.

○ 사회복지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상별 하위부문도 이에 따르고 있는 편임.

○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충청북도 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방향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

○ 첫째,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른 하위부문의 구체적인 목표 파악

○ 둘째,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구성요소로써 시설환경, 조직과 인적자원과 재정에 대하여 파악

○ 셋째,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의 공급체계를 우선적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미래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분석

3.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하위분야에 대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 및 보고서들은 대체적으로 하위부문을 인적분야의 복지부문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의 4개 부문을 분석하고자 함. 이유는 충청북도의 인적대상 사회복지부문의 영역은 보건복지국의 업무내용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의 3개 부문과 2015년부터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복지부문을 추가하게 됨.

○ 구성요소에 대하여 주로 예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여기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 조직 및 인적자원 등의 조직적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유는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교환 장소로써의 시설, 이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

임을 지닌 전문가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재정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함.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양적분석으로서 각 부문의 자료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함. 구체적으로 자료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공공데이터 및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 부문의 시설환경, 조직 및 인적자원, 재정현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함. 분석은 17개 광역시도별로 비중과 절대값 등을 비교하여 연도별 추이, 지자체별 순위에서 충청북도의 순위를 중심으로 기술함. 연도는 현재를 기준으로 3년 간격으로 2009년, 2012년, 2015년을 설정함.

II.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지표 현황¹⁾²⁾

□ 충북북도 사회복지의 비전 :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구현’

□ 사회복지의 전략목표

- 노인복지 ‘어르신 삶의 질 향상’
-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여성복지 ‘여성의 복지수준 제고’
- 아동복지 ‘아동 맞춤형 아동복지 강화’

□ 노인복지부문

○ 급속한 고령사회의 도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보장이 절실,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사회참여 기반조성이 필요함. 이행과제로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 시설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 등임.

○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은 안정적 노후소득 및 자립기반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조성, 활기찬 노후여가문화 지원 등이 해당됨. 시설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는 맞춤형 시설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시함.

□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자립능력 향상,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증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1) 충청북도청 보건복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 여성복지는 충청북도청 여성정책관실 홈페이지(life.chungbuk.go.kr) 참조

지원과 책임 증대에 대해 대처함. 이행과제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재활 역량 강화,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임.

-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에 대한 성과지표로는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증진,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역량 강화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활성화,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등을 실시함.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안정적 지원, 시설 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지표로 제시함.

□ 여성복지부문

○ 여성의 동등한 참여보장을 기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복지의 증진에 힘씀. 이행과제로는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의 복지수준 제고 등임. 주요 성과지표는 성평등정책 강화 및 대표성 제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폭력방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농(어)업인의 권리향상 및 전문성 제고,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교육활동 촉진

□ 아동복지부문

○ 아동권익신장 및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관심 증폭, 향후계획은 복지재정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이행과제로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을 선정함.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강화,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성장도모,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지표를 갖춤.

Ⅲ.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부문별 수준 분석

1. 노인복지

1) 시설환경

□ 노인양로시설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양로시설 수에 대하여 세종, 충북, 경기, 인천, 강원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세종이 17.86개로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서울의 경우 0.71개로 최하위인 17위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양로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4.56개를 상회하는 8.09개 수준이지만 1위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에서 2위를 차

지함.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충북, 강원, 경기, 전남, 충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 5개 지역의 경우 0개로 공동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84개를 크게 웃도는 7.67개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함.

□ 노인복지주택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주택 수에 대하여 세종, 전북, 서울, 경기, 인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세종의 경우 4.46개로 1위를 차지함.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0.51에 미치지 못하는 0개로 최하위에 위치해 시설 도입이 필요함. 최근 노인분양 주택관련 분양사기가 있었던 만큼 시설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됨.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인구 10만 명 당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인천, 제주, 경기, 충북, 강원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인천의 경우 70.31개로 1위를 차지함. 이에 반해 서울의 경우 15.21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45.67개를 상회하는 64.31개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충북 11개 시·군 중 보은, 괴산, 영동, 단양, 옥천 등 5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청주 제외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증평이 고령사회로 들어가 실버세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설 확충이 요구 됨.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에 대하여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인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대구의 경우 55.99개로 1위를 차지함. 부산의 경우 5.25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7.31 이상인 46.42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이미 최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에 들어가려 기다리는 노인들이라는 '대기노인'이란 신조어가 생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에 충북 역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관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관 수에 대해 울산, 전남, 충북, 광주,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울산의 경우 10.66개로 1위를 차지함. 세종의 경우 0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5.05개를 상회하는 6.81개로 3위를 차지함. 하지만 충북 도내 16개 노인복지관 모두 법인이 운영해 지자체 직영이 없는 점이 지적됨.

□ 경로당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경로당 수에 대하여 전남, 전북, 세종, 충북, 충남 순서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097개 이상인 1725개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경로당 중 30.4 %에서 에어컨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설 수 증가와 더불어 시설 확충이 필요함.

□ 노인교실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교실 수에 대하여 세종, 부산, 제주, 서울, 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0.55에 크게 미치지 못한 2.56개로 자료에 제시된 2009년 이

래 매년 최하위를 차지함. 2011년 노인 인구 10만 명 당 29.60개까지 올랐던 수치가 2015년에는 2.56개로 최근 6개년 간 최저 수치에 이르렀기에 시설 수 증가가 요구 됨.

□ 방문요양서비스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대전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광주의 경우 67.31개로 1위를 차지함. 충남 지역의 경우 평균의 절반 수준인 9.09개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8.89개 이하인 11.50개로 전체에서 14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위치함. 노인인구와 1인 가구 수 증가로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세에 있기에 이를 고려한 시설 수 증가가 필요한 시점임.

□ 주야간보호서비스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하여 광주, 대전, 서울, 전북,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광주의 경우 32.45개로 전체 1위를 차지함. 인천 지역의 경우 5.43개로 최하위인 17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4.99개 이하인 11.50개로 전체에서 10위를 차지함. 충북은 도내 인구 유입비율보다 노인인구 증가세가 더 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시설 증가가 필요함.

□ 단기보호서비스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23개를 약간 상회하는 1.28개로 전체에서 6위를 차지함. 단기보호서비스란 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 집을 비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 단기적으로 노인을 장기요양기관에 위탁하는 서비스로 필수적인데 노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음.

□ 방문목욕서비스

○ 노인 인구 1인당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하여 광주, 전남, 제주, 강원, 대전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광주의 경우 42.67개로 2위인 전남의 16.84개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1.16개 미달하는 3.41개를 기록함. 4.46개로 16위인 세종에 이어 최하위인 17위에 위치해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의 확충이 요구 됨. 비정기적인 봉사행사로서의 방문목욕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보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대구, 울산, 경남, 충북, 경북 순서로 높게 나타남. 대구의 경우 16.13개로 1위를 차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5.52개 이상인 8.09개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하절기에는 폭염, 동절기에는 혹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만큼 계절별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수에 대하여 강원, 충북, 전북, 대전, 광주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강원 지역의 경우 4.97개로 1위를 차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32 이상인 4.68개로 2위를 차지함.

□ 노인복지시설

○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항목의 경우 6년간 전국 평균 2009년 31.74%, 2010년 30.29%, 2011년 30.24%, 2012년 29.18%, 2013년 30.49% 2014 26.90% 2015 25.90%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2015년 기준 전체 사회봉사단체 대비 노인복지시설 비율 항목에 대하여 제주, 대구, 울산, 전남, 경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제주의 경우 37.82%로 전국 1위를 차지함. 광주의 경우 11.37%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5.90% 이하인 20.65%로 전체에서 13위를 차지함. 게다가 전국적으로 2009년 이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더 감소할 가능성이 보임.

2) 조직 및 인적 자원

□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수에 대하여 세종, 충북, 경기, 인천, 경북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37.14명 이상인 58.34명으로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함. 2015년 기준 충북의 65세 인구는 22만 9천명으로 충북 전체 인구의 14.8%로 나타났고 노인성질환인 치매 및 중풍 환자가 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급증함. 이런 추세 속에서 노인양로시설 종사자가 돌보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어렵기에 충북 역시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충원이 필요.

□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 수에 대하여 충북, 강원, 전남, 경기, 충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 수 평균인 5.30명에서 크게 상회하는 21.72명으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51명의 노인공동생활주택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주택 종사자 수에 대하여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부산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주택 종사자 수 평균인 4.60명 이하인 0명으로 전체에서 최하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0인의 노인복지주택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어 관련 부문의 인원 확충이 요구 됨.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에 대하여 제주,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 평균인 1191.60명 이상인 1549.32명으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3,638인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읍면 지역 등 농촌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읍면 지역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

□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종사자 수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종사자 수 평균인 155.56명 이상인 252.54명으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593인의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만큼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함.

□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에 대하여 대전, 충북, 울산, 광주, 경기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전체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평균인 79.73명을 초과하는 132.45명으로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311인의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충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이 필요함.

□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전국 평균인 331.30명 이하인 172.48명으로 전체에서 16위를 차지함. 한 번에 방문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가 있어 별도 기관에 신청해야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지만 충북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수가 필요 노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여 인력 충원이 요구 됨.

□ 주야보호서비스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주야보호 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98.26명 이하인 69.42명으로 전체에서 10위를 차지함. 노인재가복지시설 중 서울의 경우 주야보호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을 만큼 수요가 큼. 충북의 경우에도 주야보호 서비스 종사자 지원 및 인력 보강 필요.

□ 단기보호서비스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단기보호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 경북, 전북, 충남, 인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3.82명 이하인 2.56명으로 전체에서 7위를 차지함.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센터로 노인이 가족과 함께 와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치매가족휴가제의 서비스의 하나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단기보호서비스 종사자와 함께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 방문목욕서비스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방문목욕서비스 종사자 수에 대하여 광주, 전남, 대전, 인천, 경남 순서대로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74.88명에서 크게 부족한 11.92명으로 전체에서 17위를 차지함. 충북 총 노인 인구 234813인을 28인의 방문목욕서비스 종사자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종 기업 및 봉사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방문목욕봉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꾸준한 지원을 위해서는 종사자 충원이 요구 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수

○ 노인 인구 10 만 명 당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충북은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21.65명 이상인 40.03명으로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함. 노인 가정으로 방문해 편의를 제공하는 재가보인 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실현하고 의식주 해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지원을 늘려 증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수

○ 전체 노인 10만 명당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수 항목의 경우 충북이 38.33명으로 1위를 차지함.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16.45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고령화 추세에 맞게 국내에서 최상위에 위치함. 충북에서 개발 된 9988행복지킴이 프로그램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인 복지 인력 충원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성공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기에 홍보 및 지원 확대 필요함.

□ 재가부문 사회복지사

○ 전체 사회복지사 대비 재가부문 사회복지사 비율 항목은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전국 평균인 59.39% 이하인 48.27%로 전체에서 16위를 차지함.

2. 장애인복지

1) 시설 환경³⁾

□ 장애인거주시설 수

○ 2014년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1,457개소가 있으며, 이 중 58.3%인 850개소가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임. 2012년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이후 거주시설의 수가 증가함.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수

○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33개소가 운영 중임 총복은 12개소로 전국의 5.2%를 차지함. 이는 2009년 10개소에서 2012년 12개소로 2개소 늘어난 것임.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수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운영 중이나 총복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전담하는 거주시설이 없음.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수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은 2009년 전국적으로 91개소, 2012년 107개소, 2015년 141개소로 증가함. 총복의 경우 2009년 2개소에서 2015년 3개소로 큰 변화가 없어 점유 비율은 2012년 2.8%에서 2.1%로 낮아지고 있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수

○ 최근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공동생활가정임. 전국적으로 7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복은 이의 4.7%인 34개소 운영 중임. 2009년 21개소에 비해 13개소나 늘어나 매우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 수

○ 장애인복지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224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복은 12개소가 운영 중임. 전국적인 점유율은 2009년 8개소 4.3%에서 2015년 12개소 5.4%로 약간 증가함.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경기, 경북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국적으로도 2009년 395개소에서 2012년 526개소, 2015년 625개소로 6년 간 230개소가 늘어나는 등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임. 총복의 경우도 2009년 10개소에서 2015년 15개소로 증가함.

□ 장애인 체육시설 수

○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운영 중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제주의 경우 장애인 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2~3개소씩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임. 총복의 경우 청주시에 1개소가 운영되어 청주시 이외 지역의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

○ 서울시의 경우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와 12개의 차고지 운영을 통해 2015년 153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체제임. 현재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차량이용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음. 총복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단위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개소 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1) 장애인 복지 시설의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따라 이용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장애유형별로 시설 및 조직 환경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인정하여 본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편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작성함.

□ 청각장애인 1인당 수화통역센터 수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는 전국적으로 193개소가 운영 중임. 2009년 162개소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이지만 수화통역센터 1개소 당 이용가능인원은 높게 나타남. 즉,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 1,297명 당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충북은 974명 당 1개소로 비교적 전국평균보다 낮아 이용환경이 그나마 나은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인원 및 이용 금액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월별 이용자 수 및 급여액은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시도별 이용자 수를 살펴 본 결과 2015년 1월 기준 서울시가 11,5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68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충북의 경우 2015년 1월 1,654명이 이용함. 충북의 이용금액은 1,727,417천 원임.

□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인원

○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수는 12월 기준 전체 50,769명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초과~100% 이하'가 17,6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충북은 2015년, 2014년 12월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매달 1,745명의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56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는 2009년 386개소에서 174개소가 늘어나 50%이상 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충북은 22개소로 전국적으로 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충북도 2009년 13개소에서 2015년 22개소로 9개소가 증가함.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광역단위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 충북의 경우도 청주시에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임. 충북은 1개소 운영되고 있음.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등의 지역은 의료재활시설이 운영되지 않음.

2) 조직 및 인적자원

□ 장애인 특수학교 수

○ 장애인의 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 특수학교는 전국에 167개소가 운영 중임. 충북은 9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에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장애인 특수학교를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5,531명으로 나타남. 서울시가 18.2%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7.1%로 나타남. 충북은 1,332명으로 전체의 5.2%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냄.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와 경남, 경북 지역 다음으로 나타남.

□ 지역별 장애인 임금근로자 추정 수 및 비율

○ 지역별 장애인 임금근로자 수는 지역별 통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복지패널조사를 참고함. 수도권과 광역시권, 기타 시·도에 따른 분류에서 충북이 속해 있는 '기타시도'의 경우 2009년 32.2%의 장애인고용률이 2015년 42.3%로 상승하여 장애인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이나 광역 시권은 2009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

○ 2014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체는 총 27,488개

소임.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각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2.54%로 전년도 2.48%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아직 정부부문의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장애인 고용률

○ 적용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09년에는 제주, 인천, 강원 순이었으나 2014년은 제주, 광주, 강원 순으로 나타남. 충북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2.86으로 전국 평균 2.53보다는 약간 높지만 17개 광역시도 중 10위 권에 머물고 있음.

□ 2015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 2015년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률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34.8%에 비해 충북은 39.0%로 약간 상회함. 15세 이상 인구 91,847명 중 35,848명이 취업한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46.3%에 이르고, 울산이 46.2%, 경남이 43.5% 등으로 나타남. 충북이 그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4위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저상버스 도입비율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통수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률은 감소하고 있음. 2009년은 977대가 운영되었으나 2011년 689대, 2013년 672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초기 도입된 후 사용기간이 지나 폐차 후 신규 차량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임. 충북도 2009년 36대가 운영되었으나 2011년 13대, 2013년 7대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율

○ 2014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298대로 정대수(2,692대) 대비 85.4%의 도입률을 나타냄.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는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이 163.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4.2%로 가장 낮은 도입률을 보임. 바우처 택시는 부산광역시가 1,220대로 8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편의시설 설치비율

○ 2013년 국토해양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2%를 나타낸 대구였으며, 충북이 60.3%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대체로 특·광역시권역은 설치율이 높고, 도지역은 설치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

○ 일선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9년 10,334명에서 2012년 12,907명, 2015년 16,269명으로 크게 증가함. 충북의 경우 2009년 399명이었으나 2012년은 506명, 2014년은 601명으로 증가함.

3. 여성복지

1) 일반 환경

□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여성빈곤의 척도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대구광역시가 57.2%로 가장 높고 충북은 56.0%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56.1%인 것을 볼 때 충북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 비율

○ 노후 준비와 관련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크게 구분됨. 이러한 공

적연금체계에 가입한 여성의 비율은 충북이 42.1%로 나타남. 이는 2009년 37.6%보다 늘어난 것이기는 하나 전국평균 42.2%에 약간 못 미치고 있어 17개 광역 시도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높은 곳은 46.1%를 나타낸 제주, 46.0%의 광주, 45.6%의 대전 등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적으로 51.3%로 나타남. 충북은 2015년에 이보다 약간 높은 53.6%로 나타남. 전국적으로도 제주, 서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러한 비율은 2009년 50.3%에서 2012년 49.9%에 비해 높아진 수치임.

□ 성별임금격차 비율

○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가 63.6%로 가장 높고, 서울 63.4%, 충북 6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충북은 전국평균 59.3%과 비교해 볼 때 3.4%가 높아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57.2%, 2012년 60.6%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임금격차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 안전과 관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여성피해자 비율은 충북이 81.7%로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다행히 이러한 결과는 2009년 7위, 2012년 3위였던 결과에 비해 범죄피해자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하지만 최근 남성 즉, 아빠들이 육아휴직이 늘고 있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중요해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체 근로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국 4.5%이며 충북은 이보다 약간 높은 4.7%로 나타남. 이는 2009년 전국 1.4%, 충북 1.5%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비율로 남성육아휴직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 여성 및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51개소가 운영 중임.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충북도 일부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과정에 있으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개소가 운영 중임.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을 취득한 인지, 귀화자가 2015년 현재 305,446명에 이룸. 이는 2009년 199,398명에 비해 약 53.2%가 상승한 인원으로 빠르게 증가함. 충북의 경우도 2009년 5,165명에서 2012년 7,417명, 2015년 8,736명으로 69.1%가 증가하여 전국적인 증가추세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이후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소가 운영 중임. 경기도가 30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24개소, 경북이 23개소로 나타남. 충북은 현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각 1개소 씩 12개소가 운영 중임. 앞서 제시한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를 대상으로 1개소 당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충북은 728명으로 전국 평균 1,408명에 비해 낮게 나타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 시설이 주를 이룸. 전국적으로 1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2009년 3개소에서 2015년 5개소로 증가했으나 2016년 초 미혼모시설이 운영난으로 폐쇄되면서 보

고서 발행일 기준으로 2016년 현재는 4개소가 운영 중임.

2) 조직 및 인적자원

□ 광역 및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 민선 4기(2006), 민선 5기(2010), 민선 6기(2014)의 광역의회 여성의원 활동비율은 전국 평균 14.3%이지만 충북은 12.9%로 낮게 나타남. 참여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와 대전으로 27.3%로 나타남.

○ 기초의회 여성의원은 전국 평균 25.3%이지만 충북은 21.4%로 낮게 나타남.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33.8%의 여성의원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33.2%, 대전시가 31.7%, 경기도 31.3%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충북의 경우도 2006년 민선 4기 의회에는 13.0%였으나 2014년 민선 6기 의회에는 21.4%로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11.6%로 나타났으나 충북은 7.2%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 비율은 2009년 4.8%, 2012년 5.7%에서 비교적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보다 낮았음.

4. 아동복지

□ 아동양육시설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1개로 전체에서 11위를 차지함. 2009년 10개, 2012년 11개, 2015년 11개로 꾸준한 모습을 보임. 충북에서 지난 3년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진 요보호 아동이 482명에 이룸. 보호자가 없는 경우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없는 처지의 아동을 요보호 아동이라고 함.

□ 아동보호치료시설

○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개로 전체에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과 공동 3위를 차지함.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국고가 아닌 지자체 지원만으로 운영돼 지역과 시설별 재정편차가 심함. 아동보호치료시설을 국가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자립지원시설

○ 전체 자립지원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12개, 2012년 총 12개, 2015년 총 12개로 일정한 추세를 보임. 전국적으로 시설수의 변동이 없음.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개로 전체에서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과 공동으로 3위를 차지함. 경남과 경북 등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아동일시보호시설

○ 전체 아동일시보호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13개, 2012년 총 12개, 2015년 총 12개로 대체로 일정한 추세를 보임. 전체 아동일시보호시설 수에 대하여 서울이 5개로 1위를 차지함.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개 지역의 경우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없음.

□ 아동상담소

○ 전체 아동상담소 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39개, 2012년 총 10개, 2015년 총 6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전체 아동상담소에 대하여 인천 5곳, 경기 1곳만이 남아있음. 충북은 시설이 없음.

□ 아동전용시설

○ 전체 아동전용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3개, 2012년 총 3개, 2015년 총 4개로 경남에서 시설이 없어진 반면 충북에 2 개소가 신설되어 증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2개로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함.

□ 개인양육시설

○ 전체 개인양육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09년 총 25개, 2012년 총 34개, 2015년 총 20개로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1개로 전체에서 5위를 차지함. 2009년 1개, 2012년 1개, 2015년 1개로 일정한 모습을 보임.

□ 공동생활가정

○ 전체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항목의 경우 각 2012년 총 489개, 2015년 총 480개로 감소함. 충북의 경우 2015년 기준 23개로 전체에서 8위를 차지함. 2012년 26개, 2015년 23개로 감소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 45개소에서 2015년 57개소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충북의 경우 2009년도부터 3개소만 운영되어 운영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시설이나 인력이 확대되지 않아 업무과중이 우려됨.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 건 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09년 9,309건이던 신고가 2015년 16,651건으로 크게 증가함. 충북의 경우도 2009년 600건에서 2015년 816건으로 크게 증가함.

□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전국적으로 3,474개소이던 것이 2012년 4,036개소, 2015년 4,102개소로 증가함. 충북의 경우 2015년 현재 188개소가 운영 중인데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겪으면서 일부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 지역아동센터 수의 증가는 이용아동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있음. 2009년 97,926명이 이용하였으나 2015년 109,661명의 이용아동이 집계되어 연간 10만 명의 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시설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5,119명, 2012년 5,927명, 2015년 6,357명으로 이용아동이 증가하고 있음.

5. 사회복지 재정

1) 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

○ 2015년도 국회 확정 본예산 상 사회복지·보건 지출은 115.7조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0.8%를 차지함. 2009년 정부 총지출은 2009년에 302조 원 수준에서 2015년 375조 원으로 1.2배 성장하였고, 사회복지·보건 지출은 2009년 80조 원에서 2015년 116조 원으로 1.5배 커졌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 보다 약 1.5배 빠른 7.7%에 이룸. 이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는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지닌 법정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보건 재

정사업의 특성에 기인함. 특히 4대 공적연금과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하여 2014년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대표적인 법정 의무지출임.

○ 사회복지·보건 내에서도 정책영역별 재정규모나 증가 추세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데, 재정규모로는 단연 공적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 기준 39조 6,612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보건 지출의 34.3%에 이른다. 한편, 노인·청소년 부문과 보육·여성·가족부문의 경우 2015년 현재 전체 사회복지·보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8%와 4.7%로 주택(15.9%)이나 노동(13.4%)부문보다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각각 22.3%와 18.3%씩 증가하여 가장 빠른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동 부문의 급격한 성장은 특히 기초연금도입과 무상보육 확대에 기인함(보건복지부데이터포털).

○ 2015년도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비 총액은 28조 7,762억 원임. 이들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국비-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운용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임.

○ 2015년 보육료지원 사업 이관과 기초연금의 확대 시행,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 개편 등으로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총사업비의 국가분담률은 2014년 대비 9.6% 높게 나타나지만, 보육료지원 지방비에 누리보육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분담률은 64.9%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2) 각 시도별 지방비 재정

○ 광역자치단체별 지방비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61,725,0413백만 원으로 경기도가 15,216,198백만 원, 서울시가 14,502,519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1,684,169백만 원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나타남.

○ 시도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은 2014년 전국적으로 30.64%에 달함. 이는 2009년 24.96%에서 1.22배 증가한 것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광주, 대전의 경우 각각 41.39%, 41.46%를 차지하여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구도 39.41%, 부산 38.52%, 서울 37.96% 등으로 광역시의 복지예산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충북의 경우 2009년 23.06%에서 2014년 26.53%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평균 보조사업 비중은 90.5%로 전 분야 평균 52.4%의 1.7배에 달함. 사회복지·보건 정책영역별로는 기초생활보장(98.4%), 보육·가족 및 여성(94.4%), 노인·청소년(91.4%), 취약계층지원(87.7%), 사회복지일반(73.0%), 주택(70.4%), 노동(60.9%), 보훈(27.3%) 순으로 보조사업 비중이 높았음.

3) 지역별 사회복지비 지출

○ 지역별로 세출결산액 중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은 28.87%로 낮았으며 2012년 대비 증가율도 충북은 4.43% 정도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에 그침. 지출비율은 낮지만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제주로 8.27% 서울 7.58%, 전남 7.39%, 경기 7.32%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부분의 합계를 말함.

○ 2015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15.1%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광주가 11.67%, 인천 9.68%, 서울 9.63%, 대구 9.58%, 충북 9.57% 등으로 충북이 비교적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남.

4)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지출의 관계

○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84.7%로 가장 높고, 울산이 72.2%, 경기도 67.4%, 인천이 67.0%, 부산 60.1% 등으로 나타남. 충북은 35.2%로 전남 23.8%, 강원 27.1%, 전북 29.7%, 경북 33.3%보다 약간 높지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는 .601(* $p < 0.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은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도 낮은 것을 뜻함.

○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과 관련한 이러한 해석은 2012년보다 설명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SPSS를 통한 해당연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 값이 2012년은 .521(* $p < 0.05$)이었으나 2015년 .601로 높아져 사회복지비 지출과 재정자립도의 유의미한 관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IV. 결론

1. 논의

○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자료는 국가의 공급자 중심으로 정리한 통계자료이므로 사회복지수준의 평가에서 무엇을 측정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즉,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제외되었음.

○ 사회복지수준 분석은 법령에 따른 수량중심적인 통계자료를 통하여 접근을 시도하였으므로 이용자 중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어려웠음.

○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을 검토한 결과, 단일측정 항목에 대한 시·도간 비교에서 순위를 평가할 수 있지만 복합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단순한 합계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판단해야할 것임.

○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감소추세에 놓고, 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서비스의 증가추세에 따라 종사자의 역할을 기대해야할 것이며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재가이용자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임.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증가(강태현, 2016), 장애인의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에 따라 개별계획을 지원하는 개별유연화(personalization) 정책(김영대·나동석, 2016), 여성의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빈곤문제,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성인지적 사회안전망(박영란, 2007),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강구하여야할 것임(곽민희, 2016).

2. 제한점

○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수준의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공급자 중심으로 분석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수준은 파악하기 어려움.

○ 충청북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농과 시군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도청인 청주 지역에 집중화되고 청주 외 지역에는 부족한 상황을 좀 더 깊이 분석하지 못하였음.

3. 제언: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 도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재의 수준을 파악함에 따라 앞으로의 도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할 것임.

○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재조명하여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임. 대상별로 나누어 향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욕구발생의 원천을 파악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임.

○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수준은 평균수준에 위상을 갖는다고 생각함.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환경을 보완하여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임. 또한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수준의 시설환경과 인적자원으로 만족스러운 효율과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부문별로 사례관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임.

○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이 중심으로 자치권을 형성해야할 것